

# 한겨레

경제 경제일반

## 윤석열 정부 홀대한 사회연대경제 연내 기본법 제정으로 재도약

사회연대경제 입법 추진단에 의원 58명 참석

한 목소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올해 반드시 제정”

현장·지자체 협력 위한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박은경 기자

수정 2025-08-28 16:17

등록 2025-08-28 15:23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제공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향한 국회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사회적경제위원장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날 김동아·최혁진 의원도 별도의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 △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협력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및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어 28일에는 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 발족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 사회혁신포럼,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우원식 의장은 축사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사회에 사회연대경제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영상 축사에서 "사회연대경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경제를 지향하며, 민주주의의 경제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사회연대경제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제공

이날 출범한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은 국회의원 58명이 참여했다. 단장은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추진단은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관련법 개정 △돌봄·주거·에너지·먹거리 등 분야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법 제·개정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조직유형별 개별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김영배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장은 "지난 10년 넘게 표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입법추진단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의 협력을 통해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입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지방정부·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도 공식 출범했다. 전국회의는 기본법 제정 지원과 함께 후속 입법과제 발굴과 논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mailto:ekpark@hani.co.kr)

---

© Hankyoreh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